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임석희 연구원

요약

한국은 적정성(40%), 지속성(35%), 통합성(25%)의 3개 항목을 가중 평균한 '머서-CFA 글로벌 연금지수(MCGPI지수)'에서 2023년 조사 대상국(47개국) 중 42위로 낮은 평가를 받음. 이러한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적정성(소득보장) 부족으로 지적되나, 공적 연금을 통한 적정성 제고는 지속성(재정안정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적 연금 활성화를 통해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적 연금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사 연금 개혁이 요구됨

- 자산운용업체 머서(Mercer)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 Institute)는 머서-CFA 글로벌 연금지수(Mercer-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MCGPI)를 통해 2009년부터 매년 세계 연금제도를 평가함
 -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국민연금 재정문제 등으로 공적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MCGPI지수는 한국과 주요국의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09년 11개국에서 2023년 47개국으로 점차 평가 대상국을 넓혀 왔으며, 한국은 2012년부터 포함됨
 - 2023년 10월에 발표된 MCGPI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종합점수 51.2점(C등급)으로 47개국 중 42위에 머무름
- MCGPI는 ① 연금 수령액의 적정성(Adequacy), ② 연금시스템의 지속성(Sustainability), ③ 공·사 연금시스템의 통합성(Integrity)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며, 항목별로 가중 평균하여 종합평가지수로 산출됨¹⁾
 - 적정성은 연금급여 수준이 노후생활에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노후소득보장 항목으로, 40%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여기에는 연금 소득대체율, 최저연금, 가계 순저축률, 가계부채 등 총 11개 항목이 포함됨
 - 지속성은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를 평가하는 재정안정화 항목으로, 35%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여기에는 은퇴 저축플랜 가입률, GDP대비 공·사 연금자산 비율, 연금수급 연령의 기대수명, 예상합계출산율 등 총 9개 항목이 포함됨
 - 통합성은 주로 사적 연금의 제도 설계와 운영 요건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공·사 연금제도의 상호보완성과 관련되는 항목으로, 25%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여기에는 사적 연금의 규제당국 승인/감독 여부, 사적 연금 플랜의 정책과 인력구성 등 총 13개 항목이 포함됨
 - MCGPI는 호주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에누에이션(Superannuation Guarantee Pension)을 바탕으로 설계됨에 따라 사적 연금 특성이 과대평가되고 전통적 DB형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음

1)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3

○ MCGPI 종합평가에 의하면 한국(51.2점)은 전체 조사국(47개국, 62.9점)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고, 아시아 주
 육국인 일본, 중국의 연금제도 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음

-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을 적정성, 지속성, 통합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47개국) 평균에 비해 각각 $\Delta 25.8$ 점, $\Delta 1.5$ 점, $\Delta 3.2$ 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주로 적정성(노후소득보장)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다만 적정성, 지속성, 통합성은 단순히 분리되어 평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 주요국¹⁾의 MCGPI 등급과 지수(2023년)

국가	등급	종합지수	순위	항목별 점수		
				적정성(40%)	지속성(35%)	통합성(25%)
네덜란드	A	85.0	1	85.6	82.4	87.7
호주	B+	77.3	5	70.7	78.4	86.1
영국	B	73.0	10	77.3	62.7	80.6
독일	B	66.8	19	79.8	45.3	76.3
미국	C+	63.0	22	66.7	61.1	59.5
일본	C	56.3	30	59.2	46.5	65.6
중국	C	55.3	35	64.2	39.0	63.7
한국 ²⁾	C	51.2	42	39.0 (25.8)	52.7 (1.5)	68.5 (3.4)
전체(47개국)	-	62.9	23	64.8	54.2	71.9

주: 1) 조사대상국 47개국 중 주요국을 제시함

2) () 안은 전체(47개국)과 격차 값임

자료: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3

○ 적정성(11개 항목) 분야에서 한국은 39.0점으로 전체 조사국(47개국) 중 47위로 최하위였으며 소득대체율, 최
 저연금 등 연금수급의 직접적 요소외 가계부채 등 가구의 경제상황 등의 취약성에도 기인함

- 분석 가중치가 높은 주요항목(2개)인 소득대체율과 최저(기초)연금에서 한국은 전체 대상국(47개국)에 $\Delta 17.7$ 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적 연금은 성숙단계에 이른다 하더라도 31.2%로 OECD 평균(42.2%)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준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기초연금은 최근 빠르게 급여수준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8%²⁾에 다다르고 있으나 OECD의 경
 우 21.2%(비기여 국가), 16.2%(기여 국가)에 비해 낮음³⁾
- 보통항목(3개)에 포함되는 사적 연금 수령 가능 최소 연령, 가계 순저축률/가계부채 등에서도 한국은 전체 대상국(4
 7개국)에 $\Delta 8.8$ 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사적 연금 수령 연령과 관련하여 한국의 퇴직연금은 이직 시 해지가 가능하여 55세 이전에도 실질적 수령이 발
 생하여⁴⁾ 사적 연금의 연금 수령 유인이 취약함
 - 가계 순저축률/가계부채 등의 취약성 또한 사적 연금의 가입유인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2) '24년 월 32만 원 수준, 월소득은 383만 원 수준을 고려함

3) 비기여 연금(Non-contributory first-tier benefits)은 조세기반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로 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OECD(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p. 137)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다소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나 55세에 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해지가 자유로움

〈표 2〉 적정성(Adequacy)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비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점수 ¹⁾		
		한국(A)	전체(B)	격차(A-B)
주요항목(2개)	연금 소득대체율, 최저연금	11.5	29.2	-17.7
	연금 소득대체율	9.0	18.2	-9.3
	최저연금	2.6	11.0	-8.4
보통항목(3개)	연금수령 연령, 가계 순저축률/가계부채 등	8.4	17.2	-8.8
기타항목(6개)	연금저축 세제혜택 등	19.1	18.4	0.7
	전체	39.0	64.8	-25.8

주: 1) 평가 점수는 각 세부항목별 가중치와 점수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값으로 산출함

자료: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3

○ 지속성(9개 항목) 분야에서 한국은 52.7점(27위)으로 전체 평균과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이는 주로 기대수명/노년부양비/출산율 등 미래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취약성에 기인함

- 지속성 항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요항목(2개)인 연금 가입률, 기대수명/노년부양비/출산율 변수를 보면, 연금 가입률은 양호한 편이나 기대수명 등에서 한국은 전체 대상국(47개국)에 △6.6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기대수명 증가, 노년부양비 증가, 최저의 합계출산율이 그 원인임
- 기타항목(3개) 중 수급액 조정(연금수급자 취업 시 연금감액) 항목은 한국이 전체 대상국(47개국)에 △2.8점이 적음
 -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금액 이상 근로소득 발생 시 연금이 감액⁵⁾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표 3〉 지속성(Sustainability)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비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점수 ¹⁾		
		한국(A)	전체(B)	격차(A-B)
주요항목(2개)	소계	18.2	23.0	-4.8
	가입률	14.0	12.2	1.8
	기대수명/노년부양비/출산율	4.2	10.8	-6.6
보통항목(4개)	GDP 대비연금자산비율, 적립금 수준 등	29.4	23.4	6.0
기타항목(3개)	소계	5.1	7.9	-2.8
	수급액 조정(취업시 감액)	0.0	2.8	-2.8
	ESG고려	4.1	4.2	-0.1
	실질성장률	1.0	0.9	0.1
	전체	52.7	54.2	-1.5

주: 1) 평가 점수는 각 세부항목별 가중치와 점수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값으로 산출함

자료: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3

○ 통합성(13개 항목) 분야에서 한국은 68.5점(34위)으로 전체 평균과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이는 주로 운용 규제 및 거버넌스 관련 분야의 취약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통합성의 경우 주요항목보다는 보통항목인 연금정보 이용 가능 여부,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서/데이터제출 여부와 기타항목인 수탁자의 요건충족 여부 등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4.5점, 3.9점, 2.0점 낮은 것으로 분석됨

5) 노령연금 수급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동안 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감액됨

〈표 4〉 통합성(Integrity)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비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점수 ¹⁾		
		한국(A)	전체(B)	격차(A-B)
주요항목(2개)	수탁자의 정책/인력구성 등	19.8	18.4	1.4
보통항목(5개)	소계	28.7	35.1	-6.3
	연금 정보이용 가능 여부	2.8	7.3	-4.5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서/데이터제출 여부	4.4	8.3	-3.9
	다양한 연금계획보유비중, 승인/감독여부 등	21.5	19.5	2.0
기타항목(6개)	소계	20.0	18.4	1.5
	수탁자의 요건충족 여부	0.0	2.0	-2.0
	DB형에 대한 최소자금요구사항/부족자금조달기간 등	20.0	16.4	3.5
전체		68.5	71.9	-3.4

주: 1) 평가 점수는 각 세부항목별 가중치와 점수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값으로 산출함

자료: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2023

- MCGPI지수로 볼 때 한국의 연금제도는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속성, 통합성 모두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공·사적 역할 분담을 고려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함
 - 낮은 적정성은 공적 연금의 저급여성에 기인하지만 공적 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연금수준을 상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공적 연금은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제도 지속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적정성 문제는 재정중립적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적 연금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통합성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MCGPI지수 평가에서 볼 때 공적 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제도개혁 방향이 적정성, 지속성, 통합성 관점에서도 효과적임을 시사함